
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	배포일시	2018. 2. 8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주택정비과 (법·제도)	담 당 자	·과장 유삼술, 사무관 조관우, 주무관 유병순 ☎ (044) 201-3387, 3389	
	주거재생과 (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)	담 당 자	·과장 소성환, 사무관 유지만, 주무관 이남일 ☎ (044) 201-4941, 4942	
보 도 일 시		2018년 2월 9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9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! 소규모주택정비법 2.9. 시행...빈집 정보시스템 구축,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

-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,
 - 노후·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·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
 -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.
 - 또한,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.

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

-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,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.
 -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·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.
-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,
 -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.

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

-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, 높이제한, 공지기준, 조정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%까지 완화할 수 있다.
 - 또한,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%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.
-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,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.
-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,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,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,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.(2월 내 발표예정)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·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조관우 사무관(☎ 044-201-3387), 주거재생과 유지만 사무관(☎ 044-201-49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